

여야, 공수처법·국회법 놓고 격돌 예고

공수처법 위헌 주장 통합당 복귀로 임시국회 시작 통일장관·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21대 국회 원 구성에 반발했던 미래통합당의 복귀로 6일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대 국회의 장외투쟁이 오히려 실이 됐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당은 국회에 복귀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최대 뇌관은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

무엇보다도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출범 시기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통합당이 공수처

장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고, 좋은 처장 후보자를 찾아 속히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회전문 인사', '둘러막기'라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버리고 있다.

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 공적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청문회를 계기로 정보위원장과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더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국회 복귀 시기 및 전략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연 원내대표는 "부동산 안정대책, 질병청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 당론 1호 법안이 될 '일하는 국회법'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시도 국회를 쉬 수 없고 또 국회는 계속 가동돼야 한다"면서 "통합당의 조건 없는 국회복귀로 7월 국회에서는 '일하기 경쟁', '정책경쟁', '대안 경쟁'으로 일하는 새로운 국회의 모습이 우리 국민에게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 원성에 납작 엎드린 민주당

비난 여론 거세져 이해찬 대국민 사과·종합대책 마련 착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집값 안정에 대해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이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빨리 팔라는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3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발언 처음과 끝에서 두 차례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현재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는 6·17 대책과 관련해 당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국토교통부를 질타하며, 앞으로 미리 당과 조율하도록 조장식 정책위의장에게 지침을 줬다고 한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지만, 청와대발 불호령에 기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을 비롯해 심상치 않은 민심 이반의 징후가 나타난 것도 당의 대응 기조 수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가 지지층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심 지지층인 청년과 서민 등을 꺼안 수 있는 종합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여론 악화의 기폭제가 된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김태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12·16, 6·17 대책의 후속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면서 "(정부) 정책의 강도가 부족하거나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더 채우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 정책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박광은 최고위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불량을 늘리는 등 정상화에 대한 비상한 의지를 밝혔다"며 "종이호랑이가 아닌 투기 세력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실효성 있는 중부세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정도로 부동산산장이 폭발 직전이고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며 "아파트값을 잡는데 민주당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차관, 청와대 참모, 고위공무원단은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모두 팔아야 한다"며 "공천 때 1주택을 서약한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과 당원에게 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이해찬 대표 다음달 임기 마치면 회고록 집필할 계획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달 2년 임기를 마치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자서전을 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퇴임 뒤 여의도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회고록 집필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시점인 2022년 출간을 목표로 하는 책에는 이 대표가 유신 정권에 맞서 학생운동을 시작했던 1972년부터 약 50년 동안 한국 현대사를 관통한 정치 역사가 담길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50년 정치 활동을 정리하기 위한 회고록 집필을 준비 중"이라며 "이 대표는 당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역사적 기록으로서 도움이 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당 대표를 끝으로 정치 은퇴를 선언하긴 했지만, 여의도 정치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줄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당장은 당의 원로로서 상임고문 타이틀만 갖게 되지만, 임기 막바지까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총선 대승을 견인한 만큼 다음 대선 국면에서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 물밑에서 두루 관여할 것이라 분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임시 국무회의 참석하는 추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대검찰청 갈등 새 국면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서 전문수사자문단 중단 바람직 의견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충돌 사태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차원을 넘어 일선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사장들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양측의 대립 구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일단 윤 총장은 대검이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한 오는 6일까지 2~3일

간 숙고할 시간을 갖는다. 그 사이 이번 사태를 풀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 대다수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장관 지휘는 위법 소지가 있어 재고(再考)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부분적인 수사지

휘 수용 혹은 수사 재지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갈등은 봉합될 수도 있다. 법무부가 지난 3일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는 때늦은 주장이고 명분과 필요성이 없어 장관 지시에 어긋난다며 선을 그은 상태이긴 하지만, 봉합 노력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대로 추 장관이 검찰청법에 근거해 수사지휘를 100% 수용하지 않는 걸 문제삼아 곧바로 강공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

김종인 '당 밖 대권주자' 발언에 자극?

오세훈·유승민·원희룡 등 움직임 갑자기 빨라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밖에서 꿈틀거리는 대권주자'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밖에서 꿈틀거리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안다"고 밝힌 뒤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빨라지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의 '깜짝 놀랄 만한 후보' 소환이 총선 후 후지기에 들어간 이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연구소 미래10'(가칭)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년 이내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로,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주변 인사들과 중지를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안심소득 등 '포스트 코로나' 해법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 전 시장은 5일 "야당에 국민적 사선이 머물지 않는 상황에서 변화의 조짐으로 화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총선 후 집거에 들어가 경제·복지 관련 저서 집필에 몰두해온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정치권과 학계의 조력자들과 자주 만나고 있다. 조만간 용산역 인근에 임시 사무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대선은 모두가 마음을 모아 치러야 하는 총력전"이라며 "당 안팎의 훌륭한 자원이 다 함께 경쟁하고 가장 뛰어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측근은 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정 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 여젠다 발굴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토론회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비롯한 미래 의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일한 원내 잠룡인 홍준표 의원은 '친정'인 통합당 의원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혁신포럼 고문을 맡고 있으며, 법안 공동 발의에도 적극적이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3.1%~8.15%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